

필요광장

경쟁 변화와 지역의 미래 생태계



최지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라는 말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경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실제 나이키는 실적 둔화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닌텐도 등 게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젊은 계층이 늘어나면서 운동시간이 줄어들어 운동화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운동화와 게임기는 소비자의 '시간'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쟁자가 진짜 경쟁자일까?' '현재의 경쟁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와 같은 경쟁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경쟁

에 대한 통념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쟁에 대한 통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농업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경쟁자를 파악하기가 쉬웠고 경쟁 양상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업종의 경계가 명확했던 '고체 사회'에서는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경쟁자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경쟁자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적과 동지에 대한 확실히 구분 없이 위협해지고 있다. 기존 사고방식으로 경쟁의 범위와 속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액체 사회'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액체 사회에서는 기업에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경쟁자의 시장을 빼앗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기업에 중요했다. 시장점유율은 기존 시장의 규모를 가정하고 산정한 수치이다. 경쟁의 장과 게임의 룰이 수시로 바뀌는 시대에는 경쟁자 시장을 아무리 많이 빼앗았다고 해도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쟁자의 점유율이나 소비자의 시간점유율(time share)이나 일상점유율(life share)과 같은 고객점유율(customer share)이 중요하다. 시장점유율과 달리 고객점유율의 경우 기업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액체 사회에서는 경쟁사 및 협력업체와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으로만 간주했던 경쟁사를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대상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 갑을 관계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협력업체를 무늬만 협력이 아닌 진정한 협력 대상으로 대해야 한다. 생태계 관점에서 경쟁을 새롭게 이해하고 정의해야 하는 것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맞물려서 성장 혹은 쇠퇴하는 모습은 자연 생태계의 모습과 같다. 눈앞의 경쟁자와 벌이는 개체(個體) 수준의 경쟁이 있으며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종(種) 단위의 경쟁도 있다.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자연환경 속

에서 생존하고 변화해 가는 진화의 과정은 규제 기관, 미디어, 소비자, 협력업체, 금융기관과 맞물린 기업의 생존경쟁과 유사하다. 경쟁자가 좋은 경쟁이 작동하고 다양한 사업 파트너와 함께 어울리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들 책임이 있듯이 지역 내 행정기관, 언론기관, 소비자 단체 등도 지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경쟁 개념에 적합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쟁의 내용이 생태계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역의 건전한 미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내용의 파악과 공유 그리고 그에 맞는 적합한 책무를 각자의 위치에서 다해야 한다. 엉뚱한 기준을 만들어서 무의미한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노는 편이 낫다. 자원과 노력을 낭비하는 허망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기사·목소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제부터라도 경쟁의 대상과 내용을 새롭게 보고 지역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서 생존하고 변화해 가는 진화의 과정은 규제 기관, 미디어, 소비자, 협력업체, 금융기관과 맞물린 기업의 생존경쟁과 유사하다. 경쟁자가 좋은 경쟁이 작동하고 다양한 사업 파트너와 함께 어울리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들 책임이 있듯이 지역 내 행정기관, 언론기관, 소비자 단체 등도 지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경쟁 개념에 적합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쟁의 내용이 생태계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역의 건전한 미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내용의 파악과 공유 그리고 그에 맞는 적합한 책무를 각자의 위치에서 다해야 한다. 엉뚱한 기준을 만들어서 무의미한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노는 편이 낫다. 자원과 노력을 낭비하는 허망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기사·목소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제부터라도 경쟁의 대상과 내용을 새롭게 보고 지역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칼럼

알파고와 인공지능 법조인



우재훈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이세돌 9단과 구글사가 제작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개최되었다. 이세돌 9단의 분전 속에 대결은 4대1로 알파고가 승리하였다. 이세돌 9단이 보여준 인간의 무한한 능력도 인상 깊었지만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의 삶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여러 방면으로 개발돼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 금융, 교육 등 새로운 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을 창출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법률분야에 적용하면 방대한 판례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개별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량 결

정을 해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에 일부 네티즌들은 '인공지능이 재판하는 것이 현재 판사·검사가 재판하는 것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이 같은 의견이 나온 것은 기존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검찰에는 '검찰양형시스템(PGS)'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형결정에 참고 자료를 만들고 있다. 검찰양형시스템은 사안에 따라 피해정도,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을 입력하면 축적된 기존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권장 검찰 구형량(형사재판에서 수사 및 고고인 심문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형벌 종류 및 형량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검찰 구형이라 함)을 산정해주는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사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알려준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을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보면 전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을 사용해 구형을 정하는 것은 다

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필자가 몇 년 전 배당받은 사기 사건 중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70억원 상당의 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상대방 회사의 요청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의자가 보증서를 발급받아주겠다고며 수수료로 3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피의자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7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회사는 도산하였다. 심지어 피의자에게 지급한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사용한 피해자는 그 후 몇 년간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도피생활을 하였다. 또 필자가 배당받았던 다른 사기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인 대부업체로부터 3억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차용 당시 채무가 과다해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니 고을의 이자는 상당부분 지급했던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들은 3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 결과 피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찰양형시스템은 일정한 범위를 정해 권장 구형량을 제공하나 결국 최종적인 구형은 권장 구형을 참작해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법조인이 등장하면 자연·학연·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사안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달할지는 모르지만 당사자의 말을 경청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피의자를 엄히 꾸짖을 수 있는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재판은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설득해 뉘우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를 하는 것도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재판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그 역할을 뺏기지 않으려면 법조인들이 부단히 노력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社說

세상이 다 알고 전두환만 모르는 발표 명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곧 발간될 예정인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계엄군 발표 명령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당시 그가 계엄군의 시면대에 대한 발표 명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회고록이 출간되면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출간 예정인 전 씨 회고록에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12·12 사태를 시작으로 대통령 재임 시 등의 비화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18 발표 책임 소재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났고, 관련자 진술도 모두 일치한다는 게 측근들의 주장이다. 측근들은 또 전 씨가 당시 계엄사 지휘 체계를 없앴고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열도당

토와는 말일 뿐이다. 당시 전 씨가 주도하던 신군부는 5·18 발생 6개월 앞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불법 연행한 이른바 '12·12 사태'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 씨는 12·12 이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5·18 전후로 중앙정보부장(서리) 등을 지냈다. 최규하 대통령은 허수아비였을 뿐이고, 계엄사령관 역시 모든 정보와 명령 계통을 틀어쥐고 최고 권력자 전 씨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따라서 발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전 씨와 신군부를 뛰어넘는 또 다른 권력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그 누가 믿겠는가. 전 전 대통령이 기왕에 회고록을 낸다면 발표 명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회고록을 통해 거짓 해명으로 잘못을 감추려 한다면 이는 광주 시민들에게 또다시 충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수 열차 탈선사고 또 안전불감증인가

여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여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쳤다. 지난 22일 새벽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울촌역 인근에서 용산역을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 9량 중 5량이 선로를 벗어나고 기관차와 객차 2량 등 3량은 뒤집혀졌다. 이 사고로 기관사 양 모(53) 씨가 숨지고 부기관사와 정모(55) 씨 등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철도경찰대는 관제 지시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린 것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열차가 울촌역으로 진입하면서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선로가 바뀌는 지점의 곡선 코스에서 시속 35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도 시속 127km로 운행해 탈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관리 매뉴얼도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의 4배 가까운 과속으로 질주하다 탈선한 원시

적 사고라는 점에서 또다시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총장 역할을 앞두고 승객이 승무원을 포함해 27명뿐이었다는 점인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사고는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최연혜 전 사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함으로써 최고경영자 공백에 따른 기강 해이가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막중한 자리를 내던지고 금배지를 달기 위해 사퇴하는 것은 사퇴함으로써 최고경영자 공백에 따른 기강 해이가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막중한 자리를 내던지고 금배지를 달기 위해 사퇴하는 것은 사퇴하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많은 사람들이 출세와 권력을 꿈꾼다. 하지만 권력에는 만족이 없다. 권력은 누구나 한 번 맛보면 끊지 못하는 마약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높은 관직과 명예로운 직업, 부(富)를 거머쥐어도 욕망은 더욱 커진다. 이미 충분히 출세했으면서도 권력까지 손에 쥐려는 이들을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판·검사 출신, 현직 의사, 기업인 등 누가 봐도 한 분야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그것이다. 지역과 국가를 위해 출마했다는 취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었는가? 권력에 대한 욕심은 본인도 모자라 대물림까지 하려는 체도를 날기도 했다. 고려 창건의 주축 세력인 훈구파들은 자자손손 권력을 잇기 위해 시험 없이도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음서제(蔭祿制)를 만들었다. 문벌의 힘으로 벼슬에 오른 이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조정에서는 일 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무능은 부정부패

를 부르고, 정부를 약화시켜 고려말 오랑캐에게 짓밟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전직 대법관과 전·현직 검찰 고위직 자녀들이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이 온·오프라인을 달구고 있다. 입학생 선발 시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에 부모 직업이 공개되고, 직간접적으로 비가 행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법조인끼리 짜짜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입학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할 법을 다룰 법조인 양성 기관이다. 만일 특혜를 받은 입학생이 법조인으로 배출된다면, 우리의 법질서는 어떻게 될까.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 입시 과정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 교육부가 조사 내용을 축소할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의혹은 그것이 해소되기까지는 정당하다. 특히 입학이 사실이라면 이는 입시 부정이자.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현대판 음서제

기고

광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임형섭 광주전남연구원 창의경제연구실장

요즘 우리 사회에는 희망과 기대가 더욱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청년이다. 대학 졸업 시즌을 맞이하여 원대한 꿈을 품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는 청년들은 희망찬 앞날을 기대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졸업은 축하를 받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 이유는 졸업과 동시에 구직 전선에 뛰어들지만, 거대한 채용 장벽에 막혀 좌절을 겪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2%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공식 청년실업자 수가 40만명에

육박하며, 취업에로계층 청년을 포함하면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 크다. 전체 실업자 4명 중 1명이 청년층이며,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질도 비정규직 등 열악한 실정이다. 향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다분하다. 광주도 전국과 비슷한 양상의 청년실업 실태를 보이고 있다.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7.6%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체감실업자 수도 2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최근 실업률의 지속적 증가 추세는 청년고용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년 취업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이유로 광주를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역외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이동률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청년층 일자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현상은 광주의 미래, 광주의 도시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은 인적자본이다. 청년은 지역사회 인적자본의 핵심이다. 청년이 일자리를 없거나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지역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힘들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후속세대와 인적자본의 축적이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우수한 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많은 힘을 쏟는다. 마찬가지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요인은 일자리다. 최근 광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이 사업과 상호보완적 연계를 갖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주요 해법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 1000여명, 지역적으로 7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청

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다. 이 때문에 지역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동시에 전국의 청년 인재들이 광주로 유입하여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 100만대 사업 수정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 안은 노사민정 연대를 통해 적정 임금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내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광주 자동차 100만대 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고 국가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시에 당면 국가 문제인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의 틀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온 빛고를 광주가 이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반드시 이뤄질지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